

고형연료 사용시설 사용 허가신청 불허

전주시, 팔복동 제지업체 불허가 처분... 소각시설 등 사전 입지제한 강화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작업도 착수

전주시가 인근 주민들로부터 주거환경 위해 요인으로 지목받는 고형연료 사용시설의 사용 허가신청을 불허했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들의 건강 위해 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소각시설 등의 입지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전주시 도시계획조례도 개정하기로 했다.

시는 팔복동에 건축 중인 고형연료 사용시설에 대한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신청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환경오염 및 지역주민의 건강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대한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 이유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주변의 환경보호 계획 △인근 주민이 그 사용시설로 인한 영향을 수용 가능한 지(주민수용성) 등의 사항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는 제출된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신청서에 대해 △타법 저축 여부 의견조치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운영계획서의 면밀한 검토 △주변 지역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형연료제품 사용에 따른 주민수용성 미검증 및 주변 지역 환경 보호 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허가 처리했다.

앞서 시는 공업지역에 신규 소각시설 등의 진입 차단 등을 위해 지난 2019년 9월 최종결정한 태평·추천대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도 지난 8월 불합리한 공장입지 규제를 재정비하기 위한 변경결정 당시에도 소각시설과 고형연료 사용시설 등은 불허용도로 유지했다.

또한 시는 주거환경 위해 요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폐기물소각시설 등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입지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는 현재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에는 현재 주거밀집지역(주택 10호 이상)으로부터 200m 이내에는 폐기물소각시설 등의 입지가 불가능하도록 제한 운영하고 있으나,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경우 팔복동 공업지역뿐 아니라 자연·생산녹지지역도 입지가 가능한 사각지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과 소각열회수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형연료제품(SRF) 사용시설의 입지 제한을 기존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00m에서 1000m로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올 연말까지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규제심사, 전주시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조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하고는 주거밀집지역과 자연취락지구, 학교 등 경계로부터

반경 1000미터 이내 지역에서는 개발위험도가 제한되어 소각시설 등은 현실적으로 전면 입지제한이 가능하다.

이영섭 전주시 자원순환녹지국장은 "불허가 결정은 주민수용성 및 주변지역 환경보호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내린 결정"이라며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전주시 대부분 지역에서 소각시설 등의 입지가 제한되고, 환경 오염 물질로 인한 주거환경 보호와 더불어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 갈등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상지 주변 1만 2천여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전주시가 허가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워 보이며, 전주시는 차후 불허가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 소송 진행 시 해당 주민들이 이해 당사자로서 적극 심리에 참여해서 의견 개진 할 수 있도록, 심리 일자 등을 통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김옥기 기자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제도

전주시·국민건강보험공단 남부지사, 집중신청기간 운영

전주시가 상병수당제도를 널리 알려 시민들의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상병수당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시범사업 인지 부족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수급권자가 없도록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상병수당제도'는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보건복지부 공모를 통해 지난 7월부터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서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전주시 소재 사업장에서 일하는 만 15세 이상~65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으로, 가구 합산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가 해당된다.

신청 방법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남부지사에 신청하면, 공단이 심사해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근로활동 불가 기간 중 최대 150일까지 1일 당 4만7560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시는 집중신청기간과 더불어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수급자가 없도록 △전주메트로 상병수당 홍보부스 운영 △거리 캠페인 △직장가입자 알림톡 △버스승강장 BBS 홍보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동노동자, 입원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타깃홍보 등의 집중홍보 기간도 운영한다.

특히 시는 상병수당 제도의 특성

상 입원환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전주시 병원들과 협력해 찾아가는 상병수당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퇴원환자들에게 상병수당에 대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현재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4개 지자체(전주시, 충주시, 원주시, 홍성군)의 전체 신청 건수는 392건으로, 이 중 전주시 신청건수가 158건 약 59%를 차지하고 있다. 또, 전체 1억4200만 원의 지급 금액 중 전주시민이 6400만 원(64%)의 상병수당을 받고 있다.

상병수당의 필수조건인 진단서를 발급하기 위한 참여의료기관의 등록도 3단계 시범사업 평균참여율 10.8%보다 높은 12.4%로, 시는 전주시 99개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상병수당 집중신청기간을 앞두고 지난 1일 건강보험공단 남부지사, 사용자단체, 의료공급자단체, 노동자단체, 전주시보건소 등과 지역협의체 회의를 열고 시범사업의 진행사항을 공유했으며, 집중신청기간 운영에 대한 각계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김재화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는 상병수당을 전주시민들이 몰라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전주시가 앞장서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각 기관 단체에서도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고 건강해진 상태로 다시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 혁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1시간 만에 진화... 차량 1대 소실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다함께돌봄센터 방문 점검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윤철)가 10일 전주 인후3동 다함께돌봄센터를 찾아 각종 운영 사항 점검 등 현장 활동을 펼쳤다.

김윤철 위원장 등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해당 시설의 운영 상황 점검과 함께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각종 협조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만 6~12세 아동에 대한 돌봄 활동을 통해 각종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전주지역에 18곳이 운영 중이며, (사)기독교청년회연합회 위탁 운영 중인 인후3동 센터는 20명 정원으로 운영 중이다.

김 위원장은 "어린이들의 다양한 체험과 교육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운영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의정활동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지난 9일 새벽 3시에 전주 혁신도시 대방디엠티 아파트 지하 4층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다.

당직 중이던 아파트 관리 기사가 화재 경보음을 듣고 5분 만에 현장을 확인하고 즉시 소방서에 신고하여 불이 난지 1시간 만에 진화를 마쳤다.

인전 청라 아파트와는 달리 88도로 맞춰진 스프링클러가 바로 정상 작동했다. 이 불로 300여 명의 아파트 주민이 대피했으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덕진소방서 등은 새벽 4시경 일단 해당 화재 차의 불을 끄고, 전주시에서 제공한 견인차가 새벽 5시 화재 차를 침수 조에 넣어서 재발화의 소지를 완벽 차단했다. 사고 시간 30 여분 만에 완전히 진화를 완료한 것이다.

피해는 기아 니로 4500 전기차 1대 소실에 그쳤고 소방서 추산 재산 피해는 4,500만원 정도이다.

당해 아파트는 지하 1~5층까지이고, 같은 층에는 450대, 주차장 전체에는 2,400대가 넘는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

당해 아파트 관리소장은 큰 피해 없이 조기 진화에 성공한 원인으로 "최근 빈번한 전기화재 사고에 직원들이



지난 9일 새벽 3시에 전주 혁신도시 대방디엠티 아파트 지하 4층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다. 당직 중이던 아파트 관리 기사가 화재 경보음을 듣고 5분 만에 현장을 확인하고 즉시 소방서에 신고하여 불이 난지 1시간 만에 진화를 마쳤다.

경각심을 가지고 당직 근무에 임한 것이 주효했다"고 전했다. 특히 전기차 충전 구역은 월 1회씩 스프링클러 작동 상태를 점검한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특히 덕진 소방서는 8, 9, 10월 연속으로 이번 화재 사고지인 대방아파트에서 현지적응훈련을 했었으나, 마침 사고가 발생하자 지리에 익숙한 대원들이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특수구조대가 핸드트레이서를 이용해서 지상에서 끌어올리던 중 시침에서 보낸 견인차의 도움을 받아 침수 조에 넣어 완전 진화

를 하게 되었다.

이번 화재가 인전 청라아파트와 다른 점은 △스프링클러 △배연설비(연기배출) △옥내소화전의 정상 작동에 있었다고 한다.

불이난 차량은 전날 오후 6시부터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지하 4층 화재 발생 장소는 끈으로 바리케이드가 쳐져있고 매캐한 탄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

소방 당국은 경찰 등과 함께 합동 감식을 거쳐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중앙동 치맥축제 성황리 열려

전주시 중앙동(동장 박화영)에서 지난 8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야외공연장을 무대로 '2024 중앙동 치맥과 함께하는 3gg(먹고, 놀고, 즐기고) 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다양한 먹거리와 함께 주민 자치프로그램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공연을 즐길 수 있었고, 중앙동 주민을 비롯해 500여명이 넘는 사람이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중앙동 자생단체, 중앙시장 상인회 등에서 직접 먹거리 부스를 운영하였고, 주민자치프로그램



공연 또한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공동체 의식을 드높였다. 주민 화합의 장에서 풍성한 먹거리와 문화공연이 이어지며 깊어가는 가을밤을 환히 밝혔다. 한편, 축제 수익금의 일부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상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태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부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면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출: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